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세부내용

1.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및 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집중 점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진과제	주요 내용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	-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경제 기반산업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중점 점검 -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플랫폼 산업에서 자사상품 우대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전이, 경쟁 플랫폼 사업방해 행위 차단
동태적 혁신을 가로막는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	- 게임·클라우드 등 4차산업 M&A에 대하여 산업 파급효과 및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심사 -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 및 신고기준 보완 검토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 마련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 국내시장 차별문제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플랫폼 특유의 독점력 남용행위 유형 보완,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제개선 필요성 검토

또한 경쟁 원칙에 반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민생**(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 **중간재**(건설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플랫폼**(기존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방해 등)의 3개 분야를 중점 감시 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콘텐츠, 여가·건강 분야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와 거래관행에 대한 감시와 점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분야	내용
콘텐츠	· (i) 웹소설 분야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ii) 음악 저작권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iii) SNS를 통한 부당고객유인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OTT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 불공정 거래관행 등 점검 · 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 및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 감시
여가·건강	· 숙박앱에서의 숙박업자에 대한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등 불공정행위 점검 · 제약·의료기기 시장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집중 점검

이외에도 (i)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 등 구조적으로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ii)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금융지주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등 규제 완화, (iii)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A에 대한 신고면제를 확대하는 **M&A 심사제도 개선** 등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마련 및 엄정 집행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 클라우드, 게임 등), 콘텐츠(드라마, 영화 등) 및 광고 업종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점검 · 6대 기반 공정(주조, 금형 등), 8대 차세대 공정(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등 '뿌리산업'에서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등 점검 · 자동차부품, 에너지, 기계업종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유출 등 집중 감시
소상공인 부담 실질적 경감	· 가맹사업을 위한 필수품목의 판단기준 명확화, 구입강제 등 집중점검, 정보공개서 체계 전면 개편 등을 통한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 대형유통업체의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 인상 요구 등 경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중소 납품업체 고충 해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적극 지원	•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해 자율규제 적극 유도 • 숙박앱·앱마켓 등 주요 업종으로 자율규제 논의 순차적 확산

3.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i) 편법적 지배력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침해 행위, 부실계열사 지원 행위 등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ii) TRS 등 부당내부거래의 우회수단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실태를 점검하여 규율 방안을 검토하며, (iii)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관련하여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정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내용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현행: 자산총액 5 조원 이상)을 GDP 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 추진 • 동일한 판단기준, 변경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산업부와 협의 하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추진
공시제도 개선	•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50억 원 → 100억 원) 및 소규모 내부거래 제외(5억원 미만 제외) 추진 • 정보 효용성이 낮은 일부 항목은 기업집단 공시로 대체하는 등 정비하고, 12개 분기 공시 항목 중 8개를 연간 공시로 전환 추진

이외에도 공정위는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금산분리 제도 및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디지털 소비 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들의 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적극 차단	- 대형 플랫폼의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 마련 - 보건·위생용품(화장품 등), 식료·기호품(건강기능식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 강화 - 상품 검색순위 조작, 게임업체 확률 조작 등 정보 조작 집중 점검
개인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C2C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시장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방안 마련
온라인 시장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완화

한편, (i) '민관 합동 소비자안전위원회' 구성, 위해 제품의 수거·파기·공표 등 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ii) 그린 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마련, "인체 무해"와 같은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 추진 등 표시·광고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강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독서비스, 라이브커머스, 모빌리티 업종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 여행·숙박 업종에서의 환불·면책 관련 약관 조항 등 최근 수요가 증가한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의 과장광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구매취소 방해 행위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분	내용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 현장조사 공문의 구체화 - 조사공문 기재 범위를 넘어 수집된 자료에 대한 피조사기업의 반환 청구 절차
조사·심의 제도 정비	-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로서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한 심의숙개 활성화
사건유형별 관리 시스템 구축	- 장기·시효임박 사건 집중 관리 체계 구축 -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는 조직개편	· 조사-정책 부서 분리를 통해 사건처리 관리·감독 강화 및 분야별 전문성·효율성 제고 · 조사-심판 부서의 분리 운영 강화를 통해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	--

그 외에도 공정위는 사건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법집행 수단계에 대한 내부 교육프로그램 혁신·확대를 통해 사건 처리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Authors

정영진
02-3703-1776
youngjin.jung@kimchang.com

김진오
02-3703-1261
gokim@kimchang.com

고경민
02-3703-1431
kmkoh@kimchang.com

김경연
02-3703-5889
kyoungyeon.kim@kimchang.com

전기홍
02-3703-1618
khchun1@kimchang.com

최인선
02-3703-1651
inseon.choi@kimchang.com

김준연
02-3703-1826
joonyeon.kim@kimchang.com